

“농축산물 자금 1500억 즉각 투입 장바구니 물가잡기 총력 다할 것”

尹, 민생경제점검 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과 등 농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둘러본 뒤 이들 상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소비자단체·상인단체 대표 등과 만나 민생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



민생경제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냉해 입은 사과·배 더 파격 지원
해외 수입과일 물량 무제한 풀고
정부, 국민 체감성과 나오게 해야”

기 위해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5종을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과값과 관련해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어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모르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증·응급질환에 예산 5조 집중투입

정부, 병원 빅5 교수들과 대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을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내 주요 대형병원(빅5)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분만 등에 3조 투입
심뇌혈관 네트워크 등에 2조 지원

집단사직 결의 교수들과 대화 시작
교수에 “환자 곁 떠나지 말라” 당부
오늘 주요 5개 대학병원과 간담회

◆기피과에 5조원 집중 투입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10조원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박민수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올해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 대화 시도…“교수들,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한 교수들과의 대화도 시작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교수들에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요 5개 대형병원(빅5)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에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현황 등을 파악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반기, 배터리 업황개선… 수출 청신호”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 지원단 간담회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8월부터 양산 업황회복 대비 민관함께 총력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현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의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이차전지 수출현장 점검회의에 앞서 자동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대 은행 점포 5년새 700곳 줄었다

금융권, 올해만 18곳 통폐합
고령층 등 접근성 어려워져

컴퓨터,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 방식 변화와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지만 고령층, 도서·산간 거주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이 영업점(지점+출장소)을 통폐합한 곳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금

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점포 내실화 방안을 통해 통폐합시 경영공시와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통폐합절차를 어렵게 변경했지만, 효력을 잃었던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에서도 영업점보다는 모바일 앱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대은행의 영업점수는 지난해 말 기준 2818개로 2019년 말(3525개)과 비교해 20% 감소했다. 5년간 국민은행의 영업점은 254개, 신한은행은 165개, 우리은행은 163개, 하나은행은 127개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